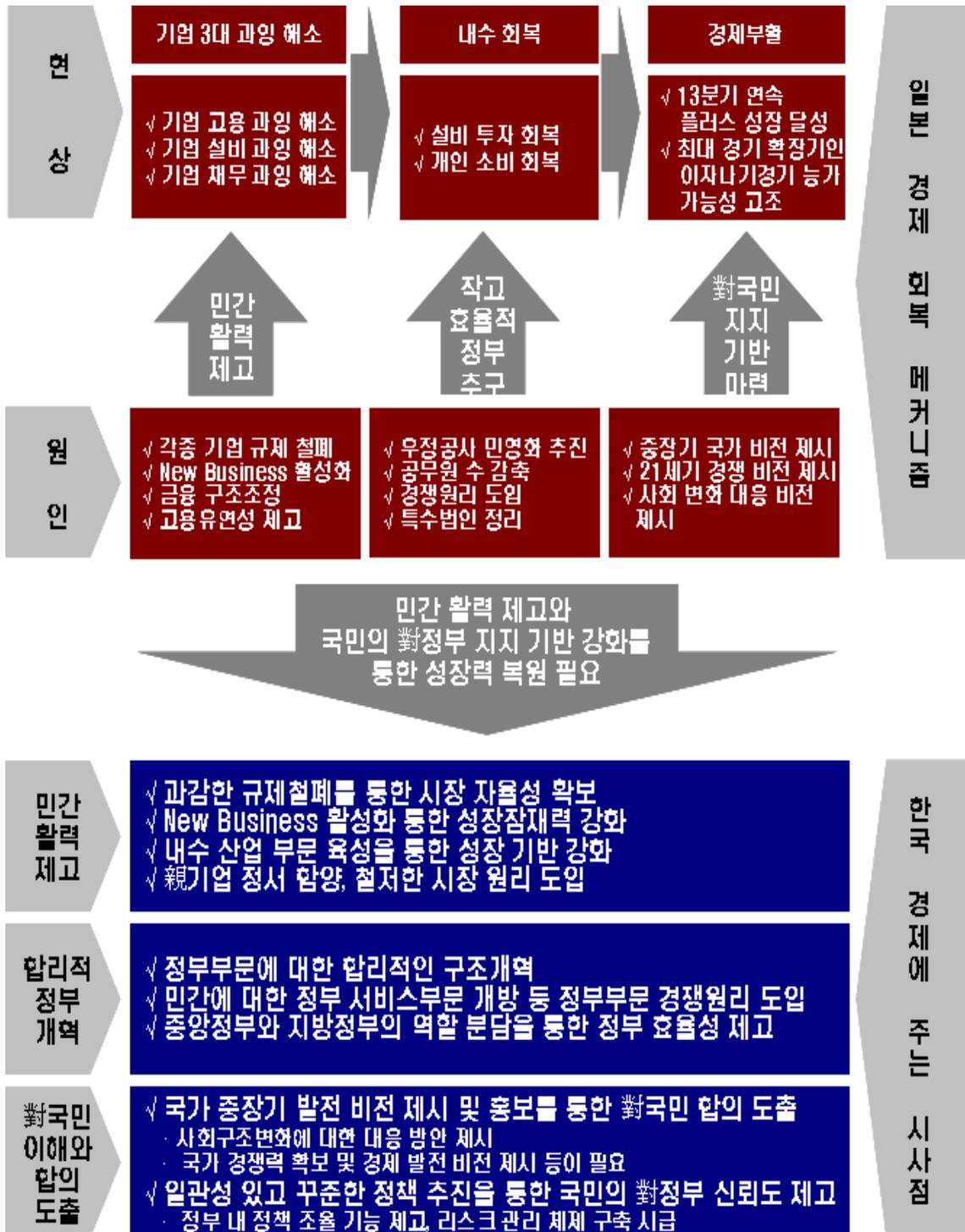


□ 부활하는 일본 경제가 주는 교훈

- 민간 경제 활력의 제고와 신뢰 회복 -

일본의 경제 부활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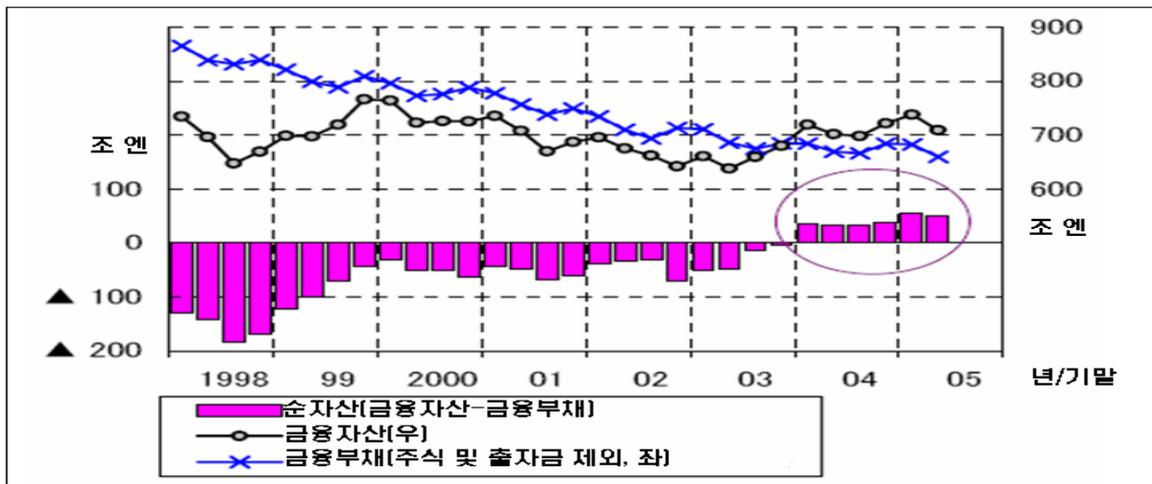
1. 부활하고 있는 일본

○ (부활하는 일본 경제) 최근 고용 과잉 등 3대 과잉 해소, 내수 회복 등 민간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음

- 민간 부문 3대 과잉 해소: 버블 붕괴 이후 민간 부분의 고용, 설비, 기업 채무 등 3대 과잉이 최근 해소되고 있음

- 고용 과잉 해소: 1993년 2/4분기부터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증가해오던 고용 판단 단칸지수(실적 베이스)¹⁾가 2001년 4/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2005년 1/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함
- 설비 과잉 해소: 1992년 2/4분기부터 2002년 2/4분기까지 플러스 증감에 되풀이 한 생산설비 판단 단칸지수(실적 베이스)가, 2002년 3/4분기부터 감소하여 2005년 4/4분기에는 제로(0) 수준까지 하락함
- 기업 채무 과잉 해소: 민간기업 비금융법인 부문 순금융자산 또한 1998년 4/4분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04년 1/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됨

< 민간기업 비금융법인 부문의 순금융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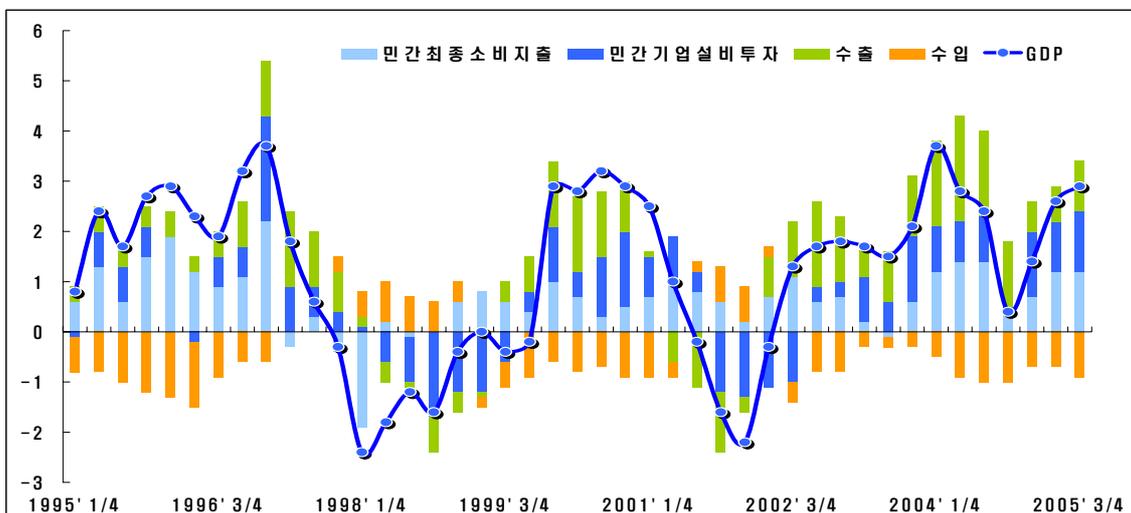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일본종합연구소(2005.12.19).

1) 단칸(短観)지수는 일본의 기업 경기체감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 분기마다 일본은행이 발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사용한 지표의 경우 제로를 경계로 이상이면 고용 및 설비 과잉, 이하이면 고용 및 설비 부족을 나타냄.

- **내수 회복:** 민간기업의 3대 과잉 해소로 인해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설비 투자 증가와 더불어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 **민간설비 투자 증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 여력 증가²⁾로 민간 설비 투자는 2002년 4/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음
 - **가계 소비 회복:** 2003년 4/4분기 이후 가계 소비 회복이 견실한 추세를 보이며 최근 2분기(2005년 1, 2/4분기)에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안정적인 경기 확장:** 일본 경제는 2002년 3/4분기부터 안정적인 경기확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최대 경기확장 국면의 문턱에 있음
 - **경기 확장 지속:** 2002년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일본 경제가 동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1.3%를 시작으로 2005년 3/4분기(동 2.9%)까지 1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음
 - **이자나기경기³⁾ 능가 가능성:** 일본경제신문(2006년 1월 3일)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소들의 85%가 지금의 경기 확장이 버블경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자나기경기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69%로 향후 최장기 경기 확장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부문별 성장 기여도 >

(단위:)



자료: 일본 내각부.

- 2) 버블 붕괴 이후 최고 64.7%(1994년)에 달하던 일본 제조 기업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은 2004년 56.4%까지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또한 1992년 4/4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였음
- 3) 1965년 11월~1970년 7월까지 2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충중류사회’를 실현한 57개월간을 이자나기(伊弉諾) 경기라고 함. 伊弉諾는 천신(天神)의 분부로 처음 일본을 다스렸던 이자나기 미고토(伊弉諾尊)에서 유래되었음. 따라서 이자나기경기란 표현은 이 시기에 세계 2차 대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놀라움을 강조하기 위해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을 사용한 것임. 결국 한편 1986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의 51개월간의 경기 확장기를 버블경기라고 함.

2. 일본 경제 부활의 원인

- (민간 활력 제고) 각종 기업 규제 철폐, 신규 제도 도입, 고용 유연성 제고,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제고시킴
 - 제도 개혁: 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철폐(1997년), 3각 합병 허용(2005년) 등 기업 규제를 개혁하고, 연결결산제도 도입(2003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New Business 활성화: 최저자본금특례제도 실시(2003년 2월, 2005년 6월에 완전 철폐)를 통해 New Business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최근(2005년 12월)에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은 물론 기업간 조인트 벤처나 공동사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건전성 회복: 금융재생법(1998년 10월, 2002년 1월 개정법 시행), 산업재생기구 설립(2003년 4월),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금융건전성을 회복함
 - 부실채권 급감: 2002년 3월 현재 52.4조 엔에 달하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005년 3월에는 24.9조 엔으로 급감하였음

< 일본의 금융재생법에 의한 부실채권 추이 >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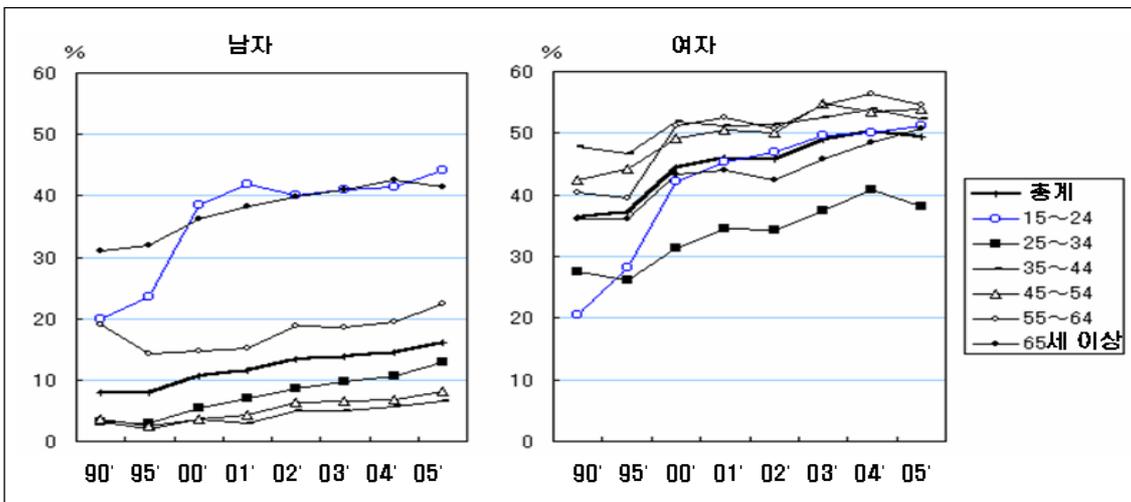
구 분	1999년 3월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2003년 3월	2004년 3월	2005년 3월
파산갱생 채권	142,050	112,470	110,610	103,960	87,020	70,090	54,660
위험 채권	203,910	197,040	186,270	229,120	166,200	145,480	119,400
관리 채권	79,550	99,840	132,970	191,340	191,840	130,440	74,990
계	425,510	409,350	429,850	524,420	445,070	346,020	249,040

자료: 일본 금융청.

-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 고용보험 가입 조건 완화(2001년), 파트타임 노동 지침 개정(2003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동시에 개선함

- **고용보험 가입 조건 완화:** 등록 파견 노동자 및 파트타이머의 연간 수입 및 노동일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 전자는 동일 파견 근무처와 주당 20시간 이상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근무처가 변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후자는 반복 1년 이상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됨
- **파트타이머 처우 개선:**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휴식시간 보장, 산전 산후 휴업 및 육아시간, 육아 및 간병 휴업을 보장해야 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또는 주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년차 유급 휴가 또한 보장해야 함
- **고용 유연성 제고:** '고용대책임시특례법', 노동기준법 개정(2003년) 등을 통해 50~60대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량노동제4)의 도입 조건 및 절차 완화 등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

< 일본의 연령별 파트타이머 비중 추이 >



자료: 일본 노동성, 매월노동통계조사, 각 년도.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진) 우정공사 민영화, 공무원 수 감축, 경쟁원리 도입, 특수법인 정리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裁量労働制度는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해 도입 되었으며 1998년 개정에 의해 200년 4월부터 조건부로 일부 화이트칼라까지 확대되었음. 기사 취재 및 편집,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 업무형 재량노동제와 경영·영업 기획업무 등을 행하는 기획 업무형 재량노동제도가 있음.

- **우정공사 민영화:** 우정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코이즈미 총리가 총리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정책으로 민영화를 통해 국가 공무원이던 27만 명의 직원을 비공무원화함
 - **공무원 수 감축:** 현재 약 65만 명인 국가 공무원을 5년간 5% 삭감시켜, 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
 - **경쟁원리 도입:** 민간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민간에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官이 독점하던 행정서비스를 民·官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시장화 테스트법(2005년 시범 사업 시행)을 2006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함
 - **특수법인 정리:** 정부 산하 특수법인 163개 중 폐지 16개, 민영화 36개, 독립 법인화 39개 등 136개에 대한 정리를 통해 1조 5,000억 엔(향후 4년 간) 규모의 재정 절약을 꾀하고, 나머지 27개도 5개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할 계획
- (對국민 지지 기반 마련) 일본 부활의 근원인 구조개혁 추진에는 국민의 코이즈미정부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산업 및 국가 발전 비전 제시를 통한 對국민 신뢰도 향상 또한 크게 작용함
- **중장기 국가 비전 제시:** ‘일본 21세기 비전’, ‘신산업창조전략 2005’, ‘공생사회’ 등 국가, 사회,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 **‘일본 21세기 비전’:** 2030년 일본 미래상에 대해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건강수명 80세’,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라는 목표 하에 GDP 성장률은 2030년까지 1% 중반을 유지(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하면서 21세기 풍요로운 민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신산업 창조전략 2005’:**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도부품·재료산업 및 제조 중소기업 강화프로그램’, 인재, 기술 등의 축적 및 진화, 지적자산 중시 경영 촉진 등 3가지 중점 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일본 산업의 획기적인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함

- ‘공생사회’: 사회구조의 급변속에 사회의 활력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의 능력 발휘, 자립, 사회 참여, 상호 지지가 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청소년육성시책, 저출산사회대책, 고령화사회대책, 장애인시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對국민 지지 획득: 우정사업 개혁에 대한 여당 내 갈등 심화로 코이즈미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개혁 반대 의원의 후보 추천을 배제한 채 총선을 실시(2006년 9월 11일), 압승함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對국민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향후 구조개혁 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3. 한국에 주는 교훈

- (민간 활력 제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시장원리 강화를 통한 민간 주도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과감한 규제 완화: 일본 경제 부활의 이면에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시장원리의 철저한 도입을 통한 민간 기업의 활력 제고 정책들이 있었음
 - 시장 자율성 확보: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권 의결권 제한 등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여건을 확대하여 고용촉진 및 소비 여력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임
 - 철저한 시장 원리 도입: 경쟁 원리, 親기업 정서 확립을 포함한 시장 원리에 대한 교육 강화, 공공부문의 시장 원리 도입 등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임
 - 신성장동력 육성: 새로운 제도 창설을 통해 New Business 발전을 꾀하고, 민간의 지적 자산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新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함
 - 새로운 지원 제도 창설: 新성장 산업 부문에 대한 기업 자본금 규제 완화, 다양한 기업 설립 형태 보장과 같은 새로운 지원 제도를 창설

- **기업 자본 조달 환경 개선:** 모험 자본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 등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지적자산 활용 능력 향상 지원:** 기업의 지적자산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 R&D 지원 강화 등 기업의 지적자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내수 산업 부문 육성:** 가계 소비 증가가 해외소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국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레저,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선택과 집중:** 백과사전식의 정책 지원보다는 특정 전략 육성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
 - **질적 개선 필요:** 교육 및 의료 등은 철저한 경쟁원리 도입, 레저 및 관광 분야는 입지 규제 완화 및 개방 가속화 등을 통해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정부 개혁)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구조개혁,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부문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등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민간과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對국민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켜야 함**
- **정부부문의 합리적 구조개혁:** 정부 산하 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자생능력을 심어줌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을 점차적으로 경감해 나가야 함
 -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개혁:** 우선 재정 자립이 가능한 정부 산하 기관들부터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순차적으로 합리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방정부가 가능한 것은 지방정부에 맡겨 중앙정부를 슬림화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정부부문에 대한 경쟁 원리 도입: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 증가, 다양한 民官 파트너십 강화 등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민간의 노하우와 활력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서비스의 양과 질적 개선을 꾀해야 함
- (對국민 이해와 합의 도출) 현 정부의 정책 혼선과 상충성은 정권 내부에서 일치된 국가 중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을 회복시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필요: 일본 경제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한 對국민 이해와 합의 도출에 있었음
 -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마련: 정부는 각 부문별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및 사회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마련과 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對국민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함
 - 일관성 있고 꾸준한 정책 추진: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국민의 對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정책 조율 기능 제고: 다양한 가능성과 의견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첩 경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일원화를 통해 정책 조율 기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경제 사회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